

복지국가유형별 소득원구조가 노년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1. 머리말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년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한국 노인의 높은 불평등은 가족중심의 소득부양구조의 급속한 쇠퇴, 취약한 노동자의 생애를 통한 빈곤 위험의 누적, 보편적 안전망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패 등의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이해된다.

이 연구는 노년의 불평등 수준은 가족부양제도, 노동시장의 계층화와 복지의 보편권이 제도화된 방식에 따라 국가별 유형적 차이가 있고 개인의 생애별 소득보장의 기회가 다양화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구조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참조하되 비서구사회의 다양한 노동시장, 가족, 복지레짐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스웨덴), 조합주의(독일), 시장자유주의(미국), 가족주의(가족부양 중심) 유형에 속하는 국가(한국, 대만, 일본)를 중심으로 노동, 복지권, 가족부양의 구조와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국가별 소득보장구조와 노년의 소득 기회의 연관성을 소득원구조를 초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원 구조는 한 나라의 총량적 생산수준, 산업구조, 고용특성, 임금 결정방식, 복지체제, 가족제도, 젠더구조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나라마다 경로의 존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소비재를 교환할 수 있는 소득원은 다양하지만 크게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이자소득, 근로를 대상으로 지불된 근로 소득, 기업과 정부와 시민, 노동자의 계약에 기초한 이전소득, 가족단위를 통해 이전되는 가

족이전소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소득원의 분포는 국가별 노동, 가족, 복지제도를 어우르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과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을 매개하여 노년의 소득 기회의 차이를 중요하게 결정한다. 자본소득은 어떤 소득에 비해 집중도가 크다. 따라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자본이 소수 집단에 집중하는 정도가 크다면 자본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심해질 수 있다. 점차적으로 금융, 자산소득의 집적과 불균등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노년의 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낮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 생산기술수준의 발전, 임금결정의 단체교섭력의 약화 등의 조건에서 노동소득의 차이도 시기에 따라 커지고 있다. 노동구조와 공공 복지 제도 이외 비공식적인 관계나 가족을 통해 지원되는 현금과 비현금도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서구사회 복지체제 유형론의 관점에서는 사적이전은 노동소득과 사회보장이전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이행기적이고 잔여적인 특징이라고 전제하지만, 한국과 대만처럼 가족중심 부양구조가 경제발전과 복지체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노동구조와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중요하게 구조하고 생애 전반을 통해 중요한 소득원이자 책임이 되고 있는 사회들이 분명 존재한다. 사적이전소득은 그 규모와 분배양식에 따라 노년의 불평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애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은 노동구조, 복지체계, 가족구조의 복잡성과 유연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마다 독특하게 구성된 소득보장체계의 영향 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교환지위를 가진 결과 개인별 생애 소득기회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득보장제도의 특성에 따라 젠더, 노동지위, 가족배경과 같은 개인특성에 따라 어떻게 노년의 빈곤위험과 불평등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Luxemburg Income Data Center (www.lisdatacenter.org) 에 수집된 주요 나라들의 소득 자료이다. 자료센터에 수집된 나라 중 서구복지국가의 유형과 아시아 사회의 소득보장체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 한국, 일본, 대만을 선택하였다. 아래에 서술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의 국가별 개인별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소득보장체계의 유형적 특성과 소득원구조와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연구가설로 제시한다. 소득보장체계는 노동, 복지, 가족부양제도의 복합으로서 이해하고 소득보장체계에 따라 소득원과 개인의 생애 소득기회가 어떻게 다양화되는가를 연구가설로 제시한다. 다음 절에서는 사용한 자료와 주요 변수의 측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국가별 그리고 노인의 성, 교육수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원구성이 어떻게 다르고 소득원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함의와 토론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2. 왜 노년의 불평등이 사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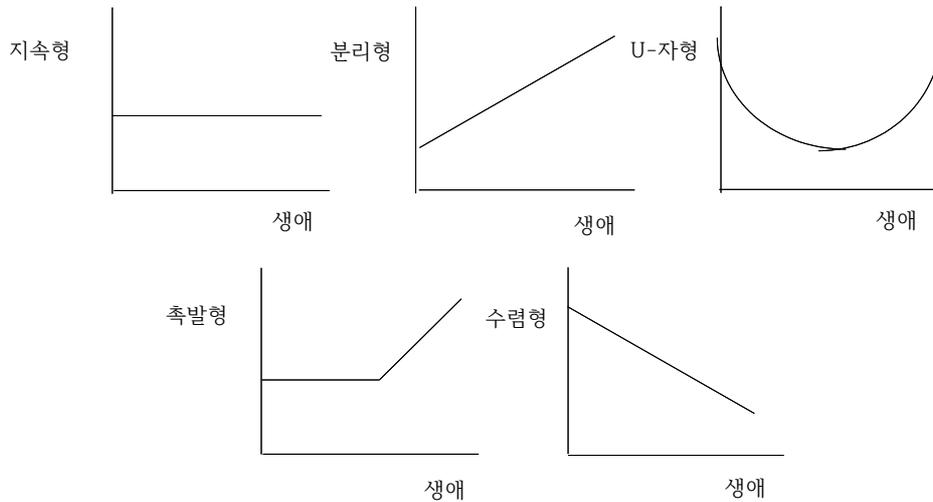
1) 생애 소득보장기회의 제도적·개인적 차이

노년의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데 소득기회의 생애·세대적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는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활동들과 이런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 은퇴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세대적 현상도 생애 경험과 활동이 세대를 통해 변화되고 지속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시점에서 생애과정의 특성은 제도화와 개인화의 영향이 혼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생애단계별 생활패턴이 비슷하고 주요한 사건들이 일관된 특성을 가지는데 주목한다. 이는 젠더관계, 복지국가, 노동조직, 가족관계의 제도화의 영향과 관련된다(Henretta, 1995; Spilerman, 1977; Kohli, 1995). 한편 복지체제와 노동조직의 유연화와 가족관계의 약화 속에서 생애과정의 다양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논의된다. 생애를 조직하였던 젠더, 가족구조가 크게 와해되고 개인지향적 가치가 커지면서 생애과정의 다양성이 한층 증가하였다고 논의된다(Van de Kaa, 1987; Beck and Gerensheim; 홍찬숙, 2015).

생애과정의 복잡성과 급격한 변화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비서구사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서구 중심의 노동, 복지, 가족제도를 적용하고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용이 이루어졌다. 인구의 지리적 분포가 변화되고 산업조직이 분화되고 교육, 복지제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세대간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애과정의 다양성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의 세대, 생애적 차원에 주목하게 된다. 다네퍼(Dannefer, 1991)는 생애주기를 통해 사회불평등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속형(constancy), 분리형(divergency), U-자형(U-shaped), 촉발형(trigger event), 수렴형(convergence)으로 유형화하였다(<그림 1>). 지속형이란 생애과정의 초기에서 경험한 불리와 혜택의 차이가 이후 생애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 유형을 노년기 불평등에 적용한다면, 지속형이란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불평등이 노년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시간의 효과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분리형과 수렴형에서는 시간의 부정적, 긍정적 부가효과가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노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초기 불평등이 노년기에 완화되어 나타난다. 촉발형은 사회불평등이 일정기간 항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이후 특정한 제도나 사건에 의하여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그림 1〉 생애불평등 변천과정의 유형



주: 세로 축은 불평등, 이질성 정도를 나타냄 (박경숙, 2003, 166, Dannefer, 1991에서 원용)

한편 생애불평등 변천과정이 다른 유형적 특성을 가지는데 나라마다 독특하게 구성된 노동, 복지, 가족부양의 소득보장체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주목된다. 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총량적 소득수준, 노동구조, 복지체제, 젠더구조, 가족특성의 복합적인 조건에서 결정될 수 있다. 노동과 복지체제는 개인이 소득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을 규정하고, 역으로 개인들의 물질적인 이해의 권력관계나 정치적 교섭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변화된다. 또한 사회마다 개인이 노동력과 소득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과정들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고도 성장과 사회보장의 보편권은 불평등을 완화한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는 한계가 있다. 여러 세대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노동권과 복지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도 빈곤과 불평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개인의 소득지위는 그 사회의 시민권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Esping Anderson, 1990; Myles and Quadagno, 1991; Ofloff, 1993). 개인의 소득지위는 개인의 노동구조와 복지제도가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고, 이 제도와 체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교섭과 갈등과정과 시민사회 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안정되고 조직된 고용, 복지 제도의 영향, 경제발전 수준 뿐 만 아니라 안정된 노동과 소득지위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조건에서 생애내, 생애단계별 불평등이 완충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회에서 생애 불평등 정도는 젠더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란과 헨레타(O'Rand & Henretta, 1990)는 미국사회에서는 성, 인종, 계

층적 지위에서의 이익과 불리(disadvantages)가 생애를 통해 누적되어 노년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글로벌 수준에서 저성장과 더불어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남성 노동력의 수요의 저하, 취약노동자의 확산, 중간계층 소득의 정체화 등의 요인이 주목되고 있다.

2) 소득원구조의 특성이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한 나라의 총량적 생산수준, 산업구조, 고용특성, 임금결정방식, 복지체제, 가족제도, 젠더구조의 복합적인 특징으로 각 국가마다 소득보장구조가 독특하게 구성되고 그 영향 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교환지위를 가지며 그 결과 생애 소득기회가 나라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인 소득보장의 특성을 다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원구조이다.

소득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소득과 비정상소득이 구분되고, 현금소득과 비현금소득이 구분되고 있다.¹⁾ 일반적으로 정상소득은 총자산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년 단위 혹은 보다 빈번한 시간 간격으로 가구 혹은 개별 성원들에 의해 받는 현금이나 비현금 재화 모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총 정상소득은 크게 노동, 자본, 이전 소득으로 구분되고 있다. 노동정상소득은 노동의 보상으로 받은 현금 혹은 비현금 소득을 가리킨다. 자본으로 부터의 정상소득은 자본으로부터 이윤의 형태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어떤 노동 보상이나 자본 이윤이 아닌 소득으로서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이전으로 구분된다. 사회보장이전은 수급자와 정부, 고용인 사이의 제도적인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소득을 가리킨다. 사회보장이전은 가구 혹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이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 기획된 소득으로서 정부나 공적 기구에서 지불되기도 하고 사적기구를 통해 지불되기도 한다. 사회보장이전은 다시 노동관련 보험과 기본수당과 공공부조로 나누어질 수 있다. 노동 관련 보험은 수급권이 고용관계의 존재여부와 계약기간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금은 고용주와 노동자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수급액은 평균근로소득과 기금기여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특정 거주민이나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전소득으로 소득조건이나 재산, 고용조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본 수당 자격에서 상위층이 제외되기도 한다. 기본 수당의 목적은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불평등을 완충하는데 있다. 노동에 관련된 기여부분과 기본 수당의 조건을 조합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불평등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와 계약정도에 따라 다르며 사회보장이전이 빈곤과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1) www.lisdatacenter.org/wp-content/uploads/our-lis-documentation-harmonisation-guidelines.pdf

는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정부와 기업에 종사하거나 자영 활동을 하는 노동자 모두가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수급액은 기여 부분과 기본 수당 부분이 결합되어 있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공적보험에 가입될 수 있지만 잦은 노동 전환자와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전부조이전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에 기초하여 생활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초점을 두어 제공되는 공적 소득지원 프로그램이다. 급여액은 동일액수일 수도 있고, 수급자의 소득과 최소한의 생계 필요액 사이의 차이로 정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조지원, 장애수당이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한 이전소득의 예이다. 이들 소득은 소득과 자산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사적이전은 노동관련 보험이나 기본수당, 공적부조 이전과 구분되어 사적으로 지원되는 이전소득을 대표한다. 사적이전은 개인과 정부, 혹은 고용주 사이에 제도적 계약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적인 소득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가족중심 부양체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성원들 사이의 상속, 이전, 부양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국도 민법, 노인복지법, 기초생활복지법 등에서 노후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의 주된 원천은 정부, 고용,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서 불평등이나 필요의 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그리고 노동구조, 공적 복지제도, 가족부양제도의 특성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독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노동구조, 공적복지제도, 가족부양제도의 특성은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유형이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한편 비서구사회의 복지체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족부양구조가 강한 가족주의 소득보장체계 유형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에스핑엔더슨의 유형론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노동과 복지의 보편권이 제도화된 특징을 한다. 자유시장주의는 능력과 기여에 기초하여 노동소득과 사회보장기회가 정해지는 특징을 갖는다. 조합주의는 부문간 차이와 여성, 외국인, 국적, 시민권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된다. 여기에 가족주의 체계는 가족부양의 규범, 제도적 강제력이 소득 기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득보장체계의 유형은 현실에서의 국가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어도 상대적으로 더 근접한 유형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소득보장체계에서는 노동기회가 보편적이고 은퇴과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연계 사회보장기회 역시 보편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다. 교육과 돌봄 기회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보장원리로 제공된다. 사회민주주의 소득보장체계에서 성이나 노동지위에 따른 사회보장기회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기회와 사회보장기회가 보편적이어서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수준이 낮을 수 있다.

조합주의 복지체계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내부자와 외부자의 소득보장 기회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의 자격이 엄격하고 젠더에 따른 노동, 가족 역할 규범이 강하다. 따라서 내국인 남성 노동자의 소득은 여성, 외국인의 소득에 비해 클 수 있다. 일과 가족에서의 젠더분리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여성의 소득원은 가족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사는 여성에서 빈곤위험이 클 수 있다.

시장자유주의 복지체계에서는 소득기회가 개인의 인적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주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기회에 의해 계층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투자에서 사적 지출 부담이 크고, 노동지위의 차이가 크고, 개인의 인적 특징과 자산에 따라 노후의 소득체계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노년의 빈곤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사회보장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자유주의 체계에서는 노년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고 빈곤위험이 생애 계층적 지위를 통해 누적되거나 지속되는 속성이 강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지위가 불안한 계층에서 노년의 빈곤율이 높을 것이다.

가족주의 복지체계에서는 노동지위와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되어 혹은 독립적으로 가족을 통한 소득이전이 중요한 구성을 차지한다. 가족의 부양기능을 사회보장제도의 취약한 결과나 잔여적 복지체제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지만(조영훈, 2001), 이런 관점은 가족부양기능이 실질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한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가족부양 원리가 노동구조와 사회보장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적 복지가 취약해서 가족기능이 강화되기 보다는 가족부양의 원리가 공적복지를 발전을 지체하는 부분이 있다. 노인 돌봄의 가족부양 책임의 결과처럼 가족중심 부양원리는 공적복지의 보편권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투자에 사적 지출이 가족주의에 의해 더욱 촉발되듯이, 시장자유주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 가족중심 복지체계에서 보여지는 노동기회의 계층화와 취약한 공적복지의 특성이 시장자유주의 체제로 귀의하는 이행기적 특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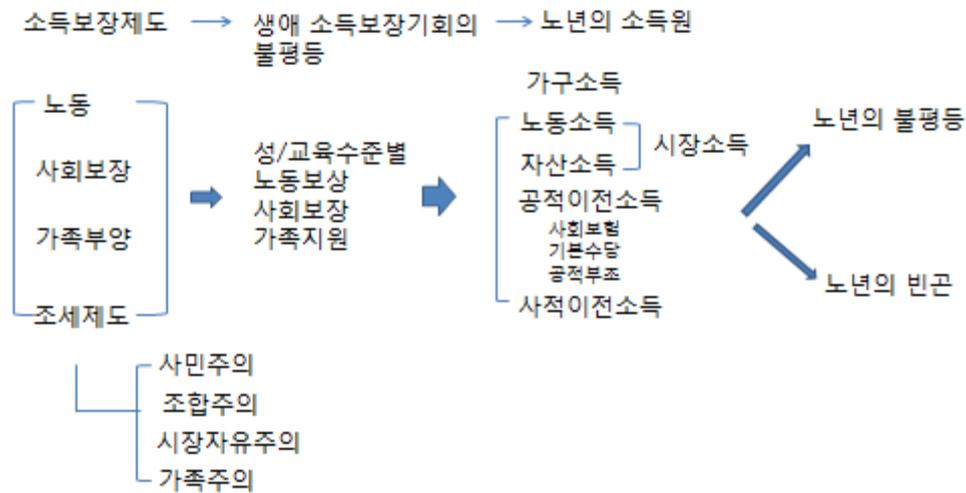
가족중심 보장체계는 소득보장의 젠더, 세대적 특성을 부각시킨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만과 한국에서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낮고 노년층의 빈곤율은 매우 높고 불평등도 노년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대간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의 제도, 문화적 조건에 비해 젊은 세대의 소득보장이 가족이전을 통해 상당히 보완되는 것 같다. 한편 노년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체계가 취약한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일 수 있다. 중고령기이후부터 불평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족이전의 부담 영향 때문일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대만과 한국에서 노년의 빈곤위험이 더 커지는 현상은 가족부양의 기본전제가 되는 세대간 동거율의 급속하게 감소한 영향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는 젠더역할 규범에 따라 노동기회나 사회보장기회에 성차별이 클 수 있다. 여성의 지위가 가족관계에 크게 의존하므로 가구유형에 따라 노년의 빈곤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리고

가족주의 부양체계에서는 노동계층화가 심하고 사회보장기회가 제한되어 노년의 빈곤위험과 불평등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계층화, 사회보장기회와 가족부양 제도가 결합된 방식에서 생애 소득기회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노년의 불평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별 소득보장체제와 생애 소득기회의 특성은 소득원구조로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득보장체제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젠더, 노동지위, 인종, 가족배경, 사회보장기회가 어떻게 노년의 불평등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국가별 소득보장체제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양체계에 따라 소득원구조와 노년기 불평등이 국가별, 개인별 차이가 나는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들을 정리한다.

〈분석틀〉 노년기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노동-복지-가족 연계 모형

분석틀



연구가설

가설1: 소득보장제도의 특성
노동보상, 사회보장기회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노년의 불평등 수준은 낮을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공적이전의 불평등완충효과 때문이다.
노동보상, 사회보장기회가 계층화된 사회에서 노년의 불평등 수준은 높을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공적이전의 불평등완충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족부양중심 사회에서 노년의 불평등 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족부양중심 사회에서 노년 불평등을 완충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동거자녀의 시장소득이다. 가족부양중심 사회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불평등완충효과는 제한된다.
가설2: 개인 생애 소득지위의 영향
성, 교육수준별 노년의 불평등 수준은 차이가 클 것이다.
가설3: 소득보장제도와 개인 생애소득지위의 상호작용
노동보상, 사회보장기회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성, 교육수준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노동보상, 사회보장기회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공적이전의 불평등완충효과는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3. 자료와 연구방법

자료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 웹에 수집된 국가별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 국가는 서구사회의 복지체제 유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시장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사민주의)과 자료센터에 소득자료가 취합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원자료는 한국의 경우 2006년 가구소득과소비조사와 농가소득과소비조사를 합친 자료가 취합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대만자료는 가구소득과소비조사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본은 2009년 실시된 일본가구패널조사자료가 포함되었다. 분석을 하면서 일본자료가 표집에 편의가 크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었다. 표본구성이 전체 인구집단의 구성을 대표하기 위한 가중치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표집에서 무응답율이 크지만 무응답을 반영한 가중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의 대표성이 확신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보되는 부분이 많았다. 미국자료는 매달 실시되는 Current Population Survey에 매년 보완되는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조사 자료로서 본 분석에서는 2011년에 실시된 2010년 소득자료를 활용하였다. 독일자료는 2011년 실시된 독일사회경제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스웨덴자료는 리

스에 가장 최근자료로 업데이트된 2006년 소득분포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나라의 자료들은 대표적인 소득조사자료이지만, 표집율, 코딩방식, 표집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리스는 소득분포의 국가별 비교를 위하여 나라마다 다양한 소득구조를 반영하여 코딩방식과 변수를 표준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가구 성원이 전체 소비수준을 중요하게 결정하므로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로 균등화한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총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세금이후의 가처분소득이 총소득을 비교할 때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금전의 경상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에 제외된 비경상소득은 부동산 매매차익, 부조, 보험금 등 비정기적 소득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공식 빈곤 측정에서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경상소득만을 고려하고 있다.

경상소득은 현금, 비현금 소득의 합인데 경상소득은 대부분 현금소득으로 구성되었다. 경상소득의 하위 범주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을 포함하고, 자산소득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익, 배당금을 포함하고, 부동산 소득은 월세 등의 임대료와 토지 수입을 포함하였다. 공적이전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소득으로 구성된다. 사적이전은 주로 별거하는 자녀로부터 지원된 소득으로 파악된다.

소득과 소득원이 가구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노인 당사자와 가구성원의 소득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세대간 동거경향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에서 각 소득원의 영향에는 동거가구의 소득원의 이전효과가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가장 주요한 시장소득이고 은퇴가 일반적인 노년에 근로소득의 비중은 감소한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으므로 노인의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동거가구의 근로소득이 노인의 실제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한 부분적일지라도 노인에게 중요한 사적이전소득의 효과를 가진다. 자본소득 또한 노인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일 수도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노년의 주된 소득원이 되는데, 직업관련 보험과 기본수당과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차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공적이전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좋지만 나라마다 세부적으로 제공된 소득원이 차이가 있어서 여의치 못하여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총소득과 소득원별 소득을 측정하여 빈곤율과 집단별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빈곤은 총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총소득의 분포와 각 소득원의 분포에서 측정하였다. 나라별 개인속성별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인구분포에 대한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²⁾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소득분포와 빈곤율

	소득구성 (%)				빈곤율	지니계수
	사업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한국2006	48.7	7.5	17.9	25.9	.43	.39
대만2010	43.5	8	25.8	22.6	.30	.35
일본2008	49.3	4.2	46.5	0.05	.15	.33
미국2010	22.1	7.6	70	0.3	.26	.41
독일2010	7	6.8	85.9	0.32	.18	.30
스웨덴2005	6	5.6	88.4	0	.10	.25

〈표 1〉은 65세 이상 노인대상자의 소득분포와 빈곤율 수준을 비교 정리하고 있다. 한국, 대만의 노인에서는 사업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사적이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두 사회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더 높고, 노년에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더 작고, 사적 이전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난다.

두 사회 모두 노년의 불평등정도와 빈곤율 수준이 높지만, 한국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된다. 일본에서도 사업근로소득 비중이 높지만 사적이전소득비중은 미미하다. 일본은 빈곤율은 낮은 편이지만 불평등정도는 다소 높게 보인다.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사업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빈곤과 지니계수에서 보면 스웨덴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고 불평등 정도도 가장 낮고 미국은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미국을 제외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과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득원과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변수는 노동, 사회보장, 가족지위와 관련된 변수들로 측정하고자 하였지만 그 변수는 제한되었다. 생애를 통한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지위가 노년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리스 자료들에 포함된 개인 변수들은 조사시점의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제한적으로 측정된 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이다.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는 비교 나라 모두에서 측정할 수 있었다. 젠더와 교육은 노동지위, 사회보장제도, 가족부양의 기회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 영향은 사회마다 소득보장구조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수준은 리스에

2) 일본자료는 원조사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리스에서 자체적으로 응답율과 전체 인구에 대응한 가중치를 생산하였는데, 전체 인구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한 결과 빈곤율이 매우 높게 추정되어, 일본은 응답율에 기초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서 교육수준을 저, 중, 고로 표준화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65세 이상에도 나이에 따라 건강수준이나 소득기회가 차이가 많으므로 고령자의 연령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형태는 혼자 사는 경우,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파트너 외 다른 가족원이 함께 사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기본 속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 노인은 다른 비교 나라들의 노인에 비해 공식교육을 받은 수준이 매우 낮다. 이는 두 사회의 근대화 시기가 상대적으로 최근이었기 때문이다. 나라별 또한 노인의 인적 특성의 두드러진 차이가 가구형태에서 보여진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는 2세대 이상 가구형태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지만,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2세대 이상 가구에 속한 노인은 일반적이지 않다. 세대간 가족부양의 정도가 기본적으로 두 집단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대만, 일본 안에서도 가구형태에 차이가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단독거주노인의 비율이 대만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대만에서는 2세대 이상 가구형태에 속한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두 사회 모두 세대간 동거가 가족부양의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동거율의 변화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1990년대 이후 세대간 동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부부가구와 노인 단독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노인의 반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향은 한국에 비해 가족부양이 더 기능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표 2〉 노인의 개인 변수의 기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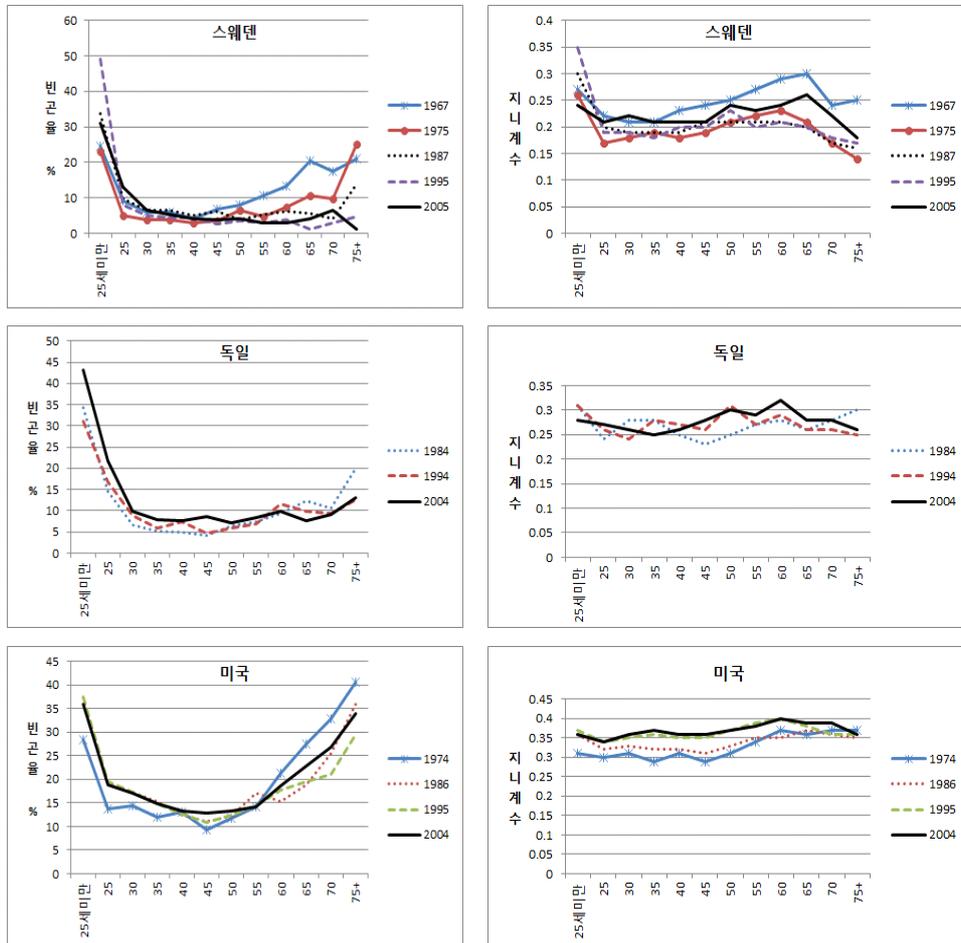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남	40.6	49.7	45.9	43.6	44.8	44
여	59.4	50.3	54.1	56.4	55.2	56
65-69	38.4	30.1	36.1	31.5	31	23.3
70-74	31.3	27.2	25.1	30.3	32.7	19.8
75+	30.4	42.7	38.8	44.5	36.3	56.9
저	82.1	81.4	29.1	21.1	21.3	45.1
중	15.6	9.6	50.1	50.4	51.1	35.8
고	5.3	9.1	20.7	28.6	27.6	19.1
단독	16.4	9.91	3.3	29.1	38	42.8
부부	40.3	33.67	27.1	47.4	56	53
2세대이상	43.3	56.42	69.6	23.5	6	4.2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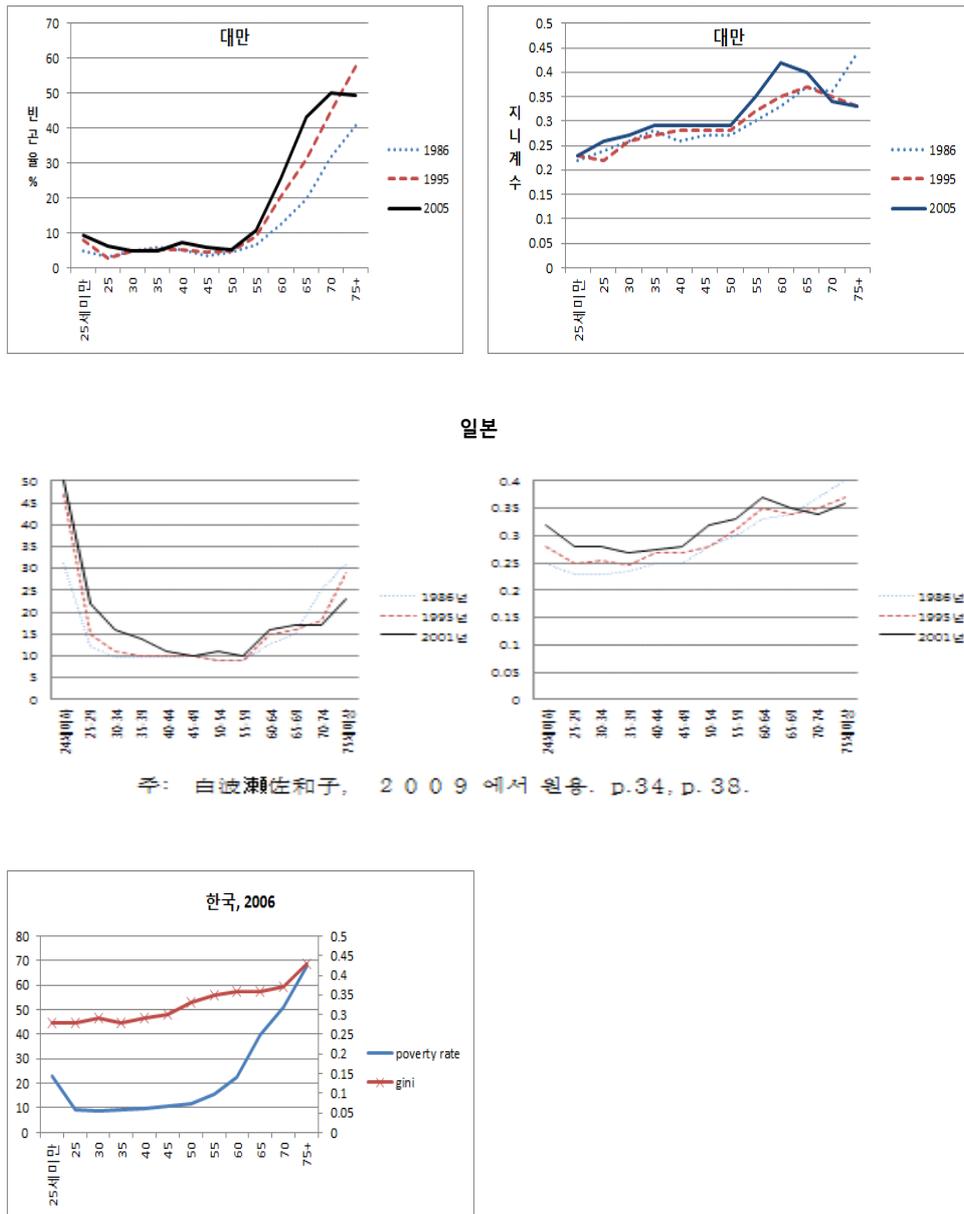
1) 복지국가유형별 생애단계별 빈곤율과 불평등의 추이

먼저 사민주의, 조합주의, 시장자유주의 복지체제의 대표적인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스웨덴, 독일, 미국과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찍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일본과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을 거쳐 오고 가족중심 부양 규범과 제도가 강조되는 대만과 한국에서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불평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2>).

(그림 2)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지니계수



〈그림 3〉 대만, 일본, 한국에서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지니계수



주: 市波瀬和子, 2009에서 인용, p.34, p.38.

주: 비교에 활용된 국가의 자료는 룩셈부르크 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에 제공된 각 국가의 대표적인 소득 조사 자료이다. LIS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해 가능한 변수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분석한 소득은 개별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로 표준화한 값이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수준으로 정하였고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추정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사회에서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1970년대 이후 변화되었지만, 국가별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1967년과 1975년 두 시점에서 보면 중노년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빈곤율이나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이 시기에 연대적인 임금이나 보편적인 사회보장 원리가 구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시기의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 수준이 오히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기의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커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년기 소득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격차가 큰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노동지위가 안정화되지 않아 소득이 제한되고 내부 격차가 클 수 있다. 청년기를 제외하면 빈곤 위험은 적은 편이며 불평등도 낮은 편이다. 1970년대 이후 그 원리가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남녀, 연령에 관계없이 안정된 노동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노동구조의 특성은 이후 시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정된 노동경력이 보장되는 것은 사회보장이전이 보편적 효과를 가지는 데에도 기여한다. 스웨덴에서 노년의 낮은 빈곤율과 낮은 불평등은 안정된 노동경력과 보편적 연금혜택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독일에서는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추이가 시기적으로 안정화된 경향이 보인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높은 빈곤율이 눈에 띈다. 시기에 따라 생애 소득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은 노동, 가족, 복지제도의 특성이 안정화되어 있고 개인들의 삶의 양식이 제도화된 영향이 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빈곤율은 청년기와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높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사실이듯이 미국에서 소득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시장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커서 소득불평등이 전 연령에서 크게 나타나고, 특히 노동시장 지위가 약한 청년기나 노년기에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청년기의 빈곤율은 지난 30년간 더 악화된 반면 노년의 빈곤율은 감소된 경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프레스턴이 지적하였듯이 인구변화와 가족, 산업 변화가 자원배분에 노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한 영향일 수 있다(Preston, 1984).

이렇게 스웨덴, 독일, 미국에서 연령집단별 빈곤위험과 불평등 정도는 차이가 크지만, 공통적으로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불평등이 증가한 현상도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사회마다 노동 및 복지체제가 발전되어온 고유한 과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연대 임금을 강조했던 스웨덴에서도 노동과 복지제도가 많이 유연화되어 생애 소득기회의 차이가 커졌을 수 있다. 특히 청년기와 중장년기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전주현상일 수 있다.

일본사회의 연령집단별 소득 분포는 시라하세사와코(白波瀬佐和子, 2009)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일본에서 연령별 빈곤율과 불평등 분포는 앞의 두 사회와 또 다른 패턴을 보인다. 빈곤율에서는 미국과 비슷하게 청년기와 노년기에 높은 패턴을 나타낸다. 또한 지난 1986년

에서 2001년 사이 70대 이상의 빈곤율은 감소한 반면, 20대와 30대의 빈곤율은 상당히 크게 상승하였다.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이후 크게 침체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율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감소하였다고 논의된다(小林美希 `2008). 더불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직 등 불안정 노동종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가 청년기 빈곤율과 불평등의 상승과 관계가 깊다고 사려된다. 한편 70대 이상에서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해당 기간 감소한 것은 1945년 전쟁종료부터 1990년 초까지 지속된 일본의 고도성장의 결과 안정된 고용과 소득지위를 유지하였던 세대가 고령화된 영향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청년기 및 중장년기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연금혜택에 있어 큰 확장이 없는 한 노년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고도성장시기를 거친 대만 사회에서는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고령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도성장 전 후 세대의 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한 결과를 반영한다. 현 대만사회 노인은 대부분 안정된 노동경력을 갖지 못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도 제한된다. 그런데 60대 이상 노년에서의 소득지위가 1990년 이후 더욱 악화되는 경향은 고도성장 전후 세대의 차이의 효과로서 잘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불평등정도도 대만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고, 또 1990년대 후반 이후 더 악화되었다. 이는 노년의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세대간의 사적 이전의 가능성도 약화된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대만 청년과 한국 청년의 낮은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서 같은 연령대의 높은 빈곤율과 대조가 된다. 이는 청년기의 노동조건 만이 아니라 가족부양구조의 영향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³⁾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연령집단별 빈곤율과 불평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생애불평등 변천과정은 경제발전단계, 노동구조, 복지제도, 가족부양 구조와 변화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안정된 노동과 소득지위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스웨덴에서는 빈곤율과 불평등 수준이 모두 낮게 유지되는데, 이는 경제발전 수준 뿐 만 아니라 안정된 노동과 소득지위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제도 조건에서 생애내, 생애단계별 불평등이 완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생애불평등 변화 패턴이 유사한데 이는 안정되고 조직된 고용, 복지 제도의 영향일 수 있다. 일본의 생산체제는 또한 젠더

3)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혼인상태,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비혼비율이 대만, 33%, 미국, 44%, 스웨덴 12%, 평균가구원수는 대만 3.4명, 미국 2.6명, 스웨덴 1.5명 으로 측정되었다. 대부분 결혼하지 않았는데 평균가구원수가 다른 사회에 비해 큰 것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大沢眞理 `2007). 중장년에 빈곤과 불평등이 낮은 데 비해 노년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높은 것은 노년의 젠더구성과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소득차이와 연관될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지위는 개인이 시장능력에 따라 차등화되며 모든 연령집단에서 불평등이 크다. 그리고 노동소득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과 노년에서 빈곤위험이 크다. 오란과 헨레타(O'Rand & Henretta, 1990)는 미국사회에서는 성, 인종, 계층적 지위에서의 이익과 불리(disadvantages)가 생애를 통해 누적되어 노년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노동과 복지의 유연화의 영향이 크다고 추측된다. 생애전반에서 소득지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향후 노년의 소득불평등이 현 노년세대와 비교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측면에서 가장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낸 시기는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이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이고 일본에서는 2000년으로 나타난다. 이 가장 안정된 시기를 거쳐 노년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에서 장년기 빈곤율과 불평등정도가 낮은 것은 무엇보다 고도성장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확대된 고용기회와 연관될 수 있다. 반면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크게 취약한 것도 고도성장 전후 세대의 소득 지위에 있어서의 단절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고도성장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될 때 중장년층의 소득 구조는 지금의 안정된 패턴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에서는 노동구조가 상당히 계층화되었고 복지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저성장의 조건이 가세하여 앞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노동 지위의 젠더차이도 크다. 노년의 소득지위는 적어도 고도성장기 산업세대가 노년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일정기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세대에서 노동조건과 소득수준의 불평등의 심화는 노년의 소득지위 개선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고도성장기 터널을 지나면서 대만이나 한국사회의 연령집단별 빈곤과 불평등 분포는 어떤 특성을 지닐까. 지난 10년여 동안 노년의 소득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은 생애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누적되는 경향이 이미 심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

2) 복지국가별 소득원별 노년의 불평등 수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라별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 분포는 차이가 크다. 이는 생애를 통하여 개인이 시장소득을 확보한 방식, 사회보장기회에 보장된 정도, 가족부양에 지원받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나라별 차이가 크다는 것은 또한 나라별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이 개인의 소득원을 결정하는 영향정도가 매우 큼을 가리킨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서구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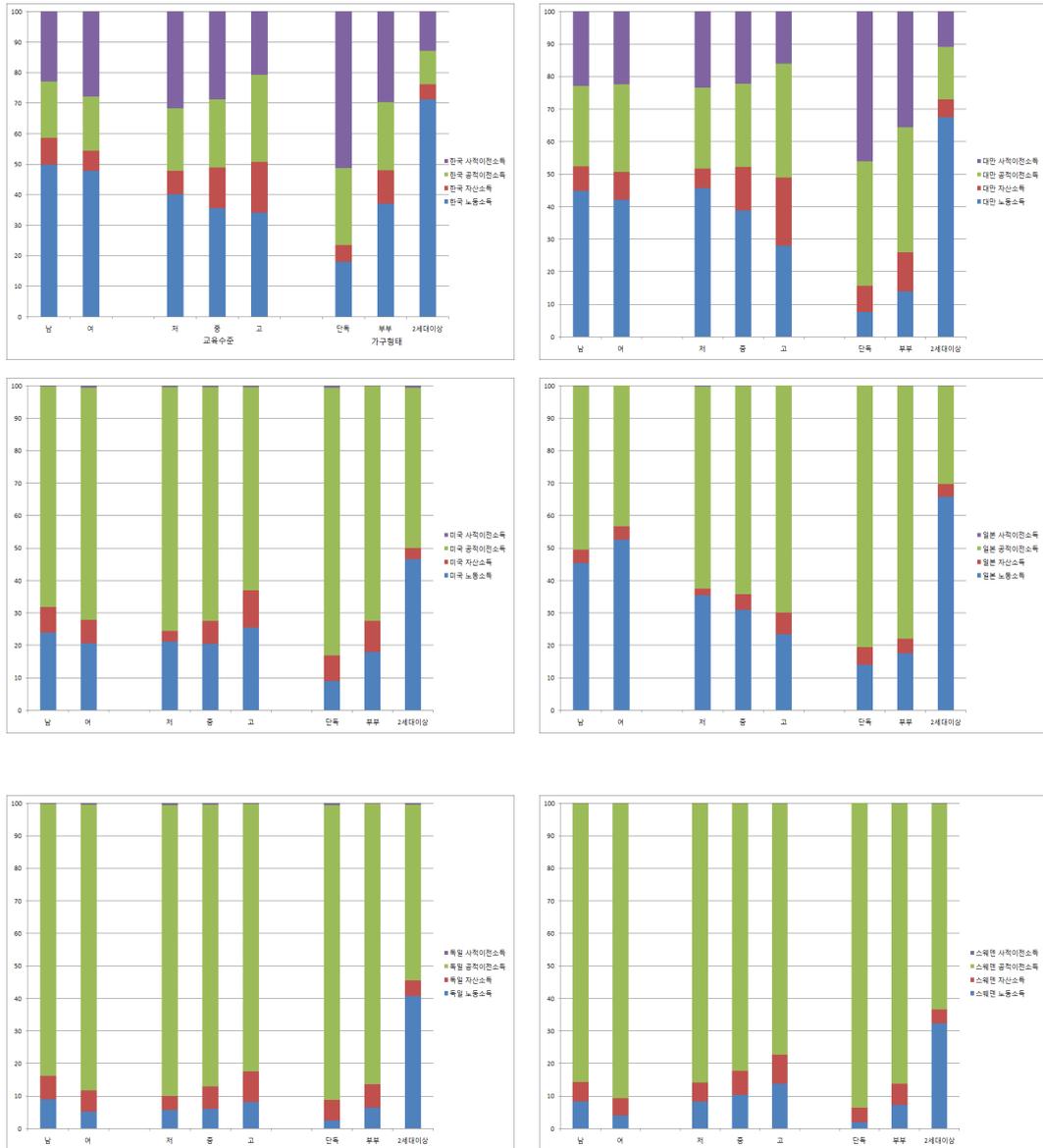
체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선택한 미국, 독일, 스웨덴간의 소득분포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더 큰 차이가 한국, 대만, 일본과 비교하면서 두드러진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공적이전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다. 이와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시장소득의 비중이 높다. 한국과 대만과 일본에서는 사업근로소득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은 노인 당사자의 소득보다 동거가구원의 소득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한국과 대만과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적 이전의 비중은 매우 제한된다는 것도 주목된다.

또한 나라별 소득보장구조의 차이는 개인들의 소득기회를 보장하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원에 대한 개인의 인적특성과 가구특성의 영향도 나라마다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는 나라별 노인의 인적특성과 가구특성별 소득원의 구성 분포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한국과 대만에서는 가구유형별 소득원 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사적이전구성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도 낮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성이 높고 2세대가구에서는 사업근로소득의 비중이 높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근로소득비중이 낮고, 단독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매우 높게 보인다. 일본에서도 높은 동거율의 영향이 혼재되어 오히려 생애 시장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사업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과 독일에서 사업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생애 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공적이전비중은 상대적으로 시장 지위가 높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보험의 불평등 심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지배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높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적게 나타난다. 노년에도 사업,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계층은 시장지위가 높다고 추정된다.

요약하면 나라마다 노년의 소득원이 노동소득에서 사회보장으로 대체되는 정도가 다르고, 사회보장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가 다르다. 가족부양은 서구에서는 거의 작용하지 않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높은 세대간 동거율과 매우 낮은 사적이전은 세대간 지원관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4〉 개인 특성별 소득원 구성



아래에서는 나라별로 각 소득원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나라별,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각 소득원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인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불평등의 차이에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영향을 분해하여 살펴 보았다(<표 3>).

〈표 3〉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효과

한국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대만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A	B	전 C	B-C	C-A		A	B	전 C	B-C	C-A
gini	0.39	0.45	0.48	-0.03	0.09	gini	0.35	0.4	0.41	-0.01	0.06
남	0.37	0.42	0.45	-0.03	0.08	남	0.35	0.4	0.41	-0.01	0.06
여	0.4	0.47	0.49	-0.02	0.09	여	0.35	0.4	0.41	-0.01	0.06
65-69	0.36	0.39	0.43	-0.04	0.07	65-69	0.36	0.35	0.4	-0.05	0.04
70-74	0.38	0.46	0.48	-0.02	0.1	70-74	0.35	0.4	0.41	-0.01	0.06
75+	0.43	0.51	0.53	-0.02	0.1	75+	0.35	0.44	0.41	0.03	0.06
저	0.38	0.53	0.51	0.02	0.13	저	0.33	0.42	0.4	0.02	0.07
중	0.37	0.48	0.47	0.01	0.1	중	0.35	0.36	0.38	-0.02	0.03
고	0.36	0.47	0.41	0.06	0.05	고	0.31	0.28	0.31	-0.03	0
단독	0.36	0.78	0.63	0.15	0.27	단독	0.37	0.79	0.52	0.27	0.15
부부	0.37	0.51	0.48	0.03	0.11	부부	0.37	0.6	0.5	0.1	0.13
2세대	0.35	0.25	0.35	-0.1	0	2세대	0.3	0.19	0.28	-0.09	-0.02
일본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미국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A	B	전 C	B-C	C-A		A	B	전 C	B-C	C-A
gini	0.33	0.37	0.24	0.13	-0.09	gini	0.41	0.59	0.35	0.24	-0.06
남	0.33	0.4	0.24	0.16	-0.09	남	0.41	0.56	0.34	0.22	-0.07
여	0.33	0.36	0.24	0.12	-0.09	여	0.41	0.62	0.36	0.26	-0.05
65-69	0.32	0.38	0.25	0.13	-0.07	65-69	0.41	0.47	0.33	0.14	-0.08
70-74	0.32	0.45	0.24	0.21	-0.08	70-74	0.4	0.59	0.35	0.24	-0.05
75+	0.34	0.32	0.23	0.09	-0.11	75+	0.4	0.68	0.35	0.33	-0.05
저	0.34	0.53	0.29	0.24	-0.05	저	0.37	0.69	0.34	0.35	-0.03
중	0.32	0.5	0.25	0.25	-0.07	중	0.38	0.62	0.33	0.29	-0.05
고	0.31	0.56	0.23	0.33	-0.08	고	0.4	0.48	0.31	0.17	-0.09
단독	0.35	0.8	0.35	0.45	0	단독	0.43	0.77	0.41	0.36	-0.02
부부	0.31	0.66	0.26	0.4	-0.05	부부	0.4	0.57	0.33	0.24	-0.07
2세대	0.32	0.21	0.22	-0.01	-0.1	2세대	0.37	0.37	0.3	0.07	-0.07
독일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스웨덴	경상	시장	시장+	공적이	사적이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소득	소득	공적이	전효과	전효과
	A	B	전 C	B-C	C-A		A	B	전 C	B-C	C-A
gini	0.3	0.78	0.29	0.49	-0.01	gini	0.25	0.66	0.19	0.47	-0.06
남	0.3	0.74	0.29	0.45	-0.01	남	0.25	0.6	0.18	0.42	-0.07
여	0.29	0.8	0.29	0.51	0	여	0.24	0.7	0.2	0.5	-0.04
65-69	0.31	0.69	0.3	0.39	-0.01	65-69	0.26	0.47	0.17	0.3	-0.09
70-74	0.29	0.78	0.28	0.5	-0.01	70-74	0.22	0.64	0.18	0.46	-0.04
75+	0.3	0.82	0.29	0.53	-0.01	75+	0.21	0.75	0.18	0.57	-0.03
저	0.25	0.83	0.25	0.58	0	저	0.22	0.63	0.17	0.46	-0.05
중	0.27	0.78	0.26	0.52	-0.01	중	0.24	0.52	0.17	0.35	-0.07
고	0.32	0.7	0.3	0.4	-0.02	고	0.25	0.41	0.14	0.27	-0.11
단독	0.29	0.85	0.29	0.56	0	단독	0.22	0.88	0.19	0.69	-0.03
부부	0.3	0.75	0.28	0.47	-0.02	부부	0.22	0.57	0.15	0.42	-0.07
2세대	0.26	0.4	0.24	0.16	-0.02	2세대	0.22	0.32	0.13	0.19	-0.09

먼저 한국과 대만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한국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자 살거나 부부가구로 사는 경우에 더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불평등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이들이 시장 지위를 보완하는 정도가 상당히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그런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가 매우 적고 그것도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촉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공공복지가 취약층에 대한 잔여적 복지와 사회보험 적용이 선별적인 이중적 특징을 갖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가 보인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사적이전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만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남녀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불평등이 높고, 단독, 부부가구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정도가 높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효과는 단독가구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된다. 가구유형에서 보면 단독, 부부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완충효과가 있지만 2세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불평등효과가 보인다. 사적이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발생한 불평등 정도를 완충하는 효과를 가진다.

한국과 대만에서 가구형태별 불평등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과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충효과가 작용하는 점은 가족부양의 영향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단독가구와 2세대가구에서 불평등 정도가 차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동거를 통한 세대간 이전에서 불평등이 크게 완충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동거가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는 동거를 자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동거율이 감소할 때, 가구유형별 심각한 불평등 차이는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심화할 수도 있다. 한국 노인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데는 동거율의 차이가 중요한 요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여 공적이전의 불평등 완충효과가 크다. 그런데 공적이전효과가 꼭 시장지위가 약한 계층의 소득지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적이전효과는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보인다.

미국에서는 공적이전효과가 불평등을 완충하는 효과가 보인다. 그리고 공적이전효과가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능이 보인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공적이전의 불평등완충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적이전효과는 일본에서와 같이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공적이전효과가 불평등을 완충하는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적이전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생애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여성, 저교육수준계층)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살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적이전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및 토론

이 연구는 국가별 소득보장구조와 노년의 소득기회의 연관성을 소득원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유형을 고려하여 사민주의, 시장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와 가족 중심 부양체계가 강한 한국, 대만, (일본)에서 소득원구조가 노년의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의 영향이 나라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소득보장구조와 생애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잠정적으로 제시한 가설과 비교하면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확실히 노인의 불평등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충하는데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매우 컸다. 공적이전소득의 완충효과는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취약한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과 노년의 빈곤위험이 클 수 있는 단독가구에서 컸다. 공적이전소득의 이런 효과는 조합주의국가로 선택한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비록 스웨덴에 비하여 노인 전체의 빈곤율과 불평등 수준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낮고, 공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에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노년의 불평등 정도가 높는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미국에서는 생애초기에서 노년에 걸쳐 생애단계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구 세 나라에서 노년의 빈곤, 불평등의 차이는 노동기회의 보편성과 사회보장기회의 포괄성 정도에 따라 크게 구분된다고 여겨진다. 노년의 불평등 정도는 노동기회가 보편적이고 사회보장이 시장지위가 취약한 계층의 소득안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때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부양이 강조되는 대만, 한국, 일본에서 소득원구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의 복지체제 유형과 또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령기 이후에 불평등이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노동과 사회보장기회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노년의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사회보장소득의 제한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사회보장기회가 제한된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최근인 이유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분절과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지위의 계층화와 연결되어 사회보장기회가 계층화되는 정도가 큰 점이 우려된다. 대만과 한국사회에서 가족부양이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가족부양의 역할은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의 계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될 부분이다. 가족부양이 노동기회와 사회보장의 보편적 기회를 더욱 약화시키는 지, 아니면 취약한 노동, 사회보장 기회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세 나라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라고 인식되는데 분석결과에서는 젠더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부양은 경제활동에서의 차별을 보상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인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추후과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만, 일본의 한국과 대만에서 노년의 불평등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중요한 것 같다. 세 사회의 가족부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젠더관계는 불평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경숙, 김미선. 2015. 노인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빈곤을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박경숙. 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박능후·송미영. 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보건복지부. 2014. “Help Ag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노인복지지표 결과는 사실과 다름.” 보도자료(2014년 10월 2일자).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
- 석상훈. 2012. “국제비교를 통해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연금이슈와 동향 분석』 (2012년 2월호). 국민연금연구원.
- 석재은·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1-22.
- 여유진. 2013.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관사회정책』 40: 185-219.
- 이원진. 2011.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5): 25-60.
- 조영훈. 2001.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사회학』 35(6): 169-191.
- 조용수. 2006. “최근 고령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717-739. (한국노동연구원, 2006. 2. 2.)
- 지은정. 2011.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333-270.
- 최옥금. 2007.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황선재·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 Ann Shola Orloff.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3. 58: 303-328
- Dannefer, D. 1991. "The Race is to the Swift: Images of Collective Aging." In G. M. Kenyon,

- J. E. Birren, & J. J. Schroots (eds.), *Metaphors of Aging in Science and the Humanities*. New York: Springer. pp. 155-172.
- Henretta, John and Angela O'Rand. 1980.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rried Women.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cy.
- Kohli, Martin, Martin Rein, Anne-Marie Guillemard, and Herman van Gunsteren. 1991. *Time For Retirement; Comparative studies of early exit from the labor for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6.7.9
- Milanovic, Branko, 2016. *Global Inequality* . Harvard 2016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Geneva: OECD. <http://www.oecd.org/>
- O'Rand, Angela. M.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 30-38.
- O'Rand, Angela and John Henretta.1999. *Age and Inequality: Diverse Pathways through Later Life*. Westview Press. ch.2.4.5.
- Smeeding, Timothy M., and Peter Saunders. 1998. "How Do the Elderly in Taiwan Fare Cross-nationally?."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Project. SPRC Paper* 81.
- Smeeding, Timothy M., and Susanna Sandstrom. 2005.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the Luxembourg Income Study(LIS) Working Paper Series* 398.
- 토마 피케티.(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 白波瀬佐和子(시라하세사와코). 2009. 『日本の不平等お考える』. 東京大學出版會.
- 타케가와쇼고(武天正吾), 이해경, 편. 2006. 『복지레짐 일한비교』. 동경대학교 출판